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① 07. ③ 08. ④ 0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한 국가의 고유 활동을 정치로 보는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무 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파트 내 공동 사용 시설의 활용 방안을 입주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이 법률에 구속된다고 본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근거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이고, B는 국회이며, C는 대법원이다.

④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은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국회는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②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명령 및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③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이해

정답 해설 : A는 지방 의회이고,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지방 의회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ㄹ.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직을 그 임기 중에 주민들의 투표로 상실시키는 제도’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5.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이익 집단이고, B는 시민 단체이며, C는 정당이다.

ㄱ. 이익 집단은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ㄴ. 시민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ㄹ. 지역 주민과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ㄷ. 정치 과정에서 산출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확정하여 공표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고,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평생 교육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③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제적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된다.

7.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기본권 유형 중 A는 자유권이고, B는 평등권이다.

③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자유권과 평등권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8. 근로자의 권리 이해

정답 해설 : 을은 갑과 달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갑은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이고, 을은 18세인 근로자이다.

④ 을은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이 병과 합의하여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0시까지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 을 모두 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에게는 근로 계약 체결을 위해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갑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이

병과 합의하여 기존 근로 계약 내용 중 갑의 근무일만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변경하면 1주 근로 시간이 42시간이 되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⑤ 병이 갑, 을과 각각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했다라도 병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갑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이고,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ㄱ. 총회는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ㄴ. 총회의 의결은 회원국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로 고정되어 있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0.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⑤ 갑이 을과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이 신분증을 갑에게 제시하였으므로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전화해 갑과 을의 계약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을 당시 갑은 을과의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이 계약 성립 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병이 아니라 을이다.

② 갑과 을의 노트북 매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유효하게 성립한다. 사례에서 청약과 승낙 시점은 갑과 을이 동의하여 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다.

③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을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성능의 다른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을 당시 갑과 을의 노트북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므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형성한 법률관계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③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 ④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나 다른 개인이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③ 정의 체포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을과 달리 형사 미성년자인 갑의 경우에만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을과 달리 갑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무를 폭행한 을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다. 오히려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 ⑤ 병이 당시 현장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갑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자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3.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 해설 : ㄷ.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라고 한다.

ㄹ.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따라서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 단계에서 보석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진술 거부권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고지해야 한다.
- ㄴ. 갑은 체포에 대하여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 해설 :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 아닌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 시기 ~ t+2 시기 중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으므로, t 시기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t+1 시기는 의원 내각제, t+2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기별 선거 결과를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합계
t 시기	지역구 의석수	40	160	200	400
	비례 대표 의석수	10	30	60	100
	총 의석수	50	190	260	500
t+1 시기	지역구 의석수	60	40	100	200
	비례 대표 의석수	60	150	90	300
	총 의석수	120	190	190	500
t+2 시기	지역구 의석수	180	30	90	300
	비례 대표 의석수	70	120	10	200
	총 의석수	250	150	100	500

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t+1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t 시기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15.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t+2 시기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인 A당의 의석수는 250석이다. 따라서 t+2 시기에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251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t+1 시기(60석)가 t 시기(10석)의 6배이다.

②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t 시기에 30석이고, t+2 시기에 120석이다.

④ t+2 시기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인을 선출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⑤ t+2 시기의 지역구 의원이 300명이고 각 지역구 선거구 당 1인을 선출하므로 t+2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는 300개이다. t+2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가 t 시기의 1.5배라면 t 시기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 수는 200개이고, 200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40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t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각 지역구 선거구 당 지역구 의원을 2명씩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이다.

16.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A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가 지는 책임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임금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정과 대문 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정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무는 대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는 C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을에 대하여 정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의 사용자로서 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17. 가족 관계와 법 이해

정답 해설 : ⑤ 을과 정의 법률혼 상태에서 C를 낳았을 당시에 A는 정의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고, B와 을은 친자 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의 출생 당시 C는 A, B와 친족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 건물은 갑과 을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 갑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갑과 을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이혼 신고를 한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③ 병의 사망 전에 B가 태어났으므로 B는 병의 직계 비속으로서 병의 상속인이다.
- ④ 정의 A를 친양자로 입양한 때부터 을과 정은 A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B는 정의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정은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국제 관습법이고, B는 조약이다.

ㄴ. 국가와 국제 기구는 모두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국제 관습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은 성문화되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9. 죄형 법정주의 이해

정답 해설 :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중 A는 적정성의 원칙이고, B는 명확성의 원칙이며, C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③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해야 한다. 절도죄의 법정형과 강도죄의 법정형은 모두 갑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관습법을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정당성까지 고려하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20.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 기관에 의해 직무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니라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이 아니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을의 경우에는 ○○법 조항에 의한 침해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